

칼럼

김 호 경 뉴시스 사회부장



### ③ 베트남 양민학살 위령비와 文대통령의 사과

취재를 다니며 디엔즈엉면 외곽에 아직 남아 있는 청동부대 기지 터도 확인했다.

중대본부와 위병소, 부대 막사 건물들이 폐허 속에 을새너스러웠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은 약 80건, 희생자는 9000여 명으로 지난 2000년 집계된 적이 있지만 추정 규모는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고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전 다시 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왜 민간인 학살을 직접 언급하며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사자인 베트남 정부가 사과하는 과거사에

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언론에서 혹은 양민학살 관련 문제를 다루면 오히려 보도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곤 했다.

한국군이 철수한 지 19년 만인 지난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단행했을 때 수교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한 보 반 키엣 베트남 수상은 "과거 두 나라 사이에 불행한 일이 많았으나 이는 양국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일"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일찌감치,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실적인 국제 외교 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 '전승국'으로서의 자존심, 국민 통합 과제 등을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방침을 정립했을 것이다.

청와대도 여러 요인을 감안해

진정성을 담되, 발언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에 나온 설명이 참고가 되겠다.

"가해자는 필요하면 사과하고 보상을 하겠다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굳이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점에서도 한일 과거사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 러시아, 영국, 독일을 제외한 모든 열강과 전쟁을 겪었기에 그들 모두에게 감정을 품고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과거를 잊기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 진영으로 참전한 국가는 미국 외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들은 그 이전에 이미 베트남을 침략한 바 있는 중국, 일본, 프랑스와 더불어 현재 베트남에 경제 원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핵심 국가들이다. 이들과의 협력은 베트남이 세계 최

빈국의 오명을 씻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베트남 인사에게 마치 인사말처럼 과거사 문제를 화두로 꺼낼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 공산당 간부, 외교부 직원, 전직 베트남 간부, 지방정부 고관, 언론인, 하다못해 문화예술계 간부나 학생들을 만나도 한국과 베트남 과거사에 대한 반응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민일 한국인들이 정히 베트남인들에게 무언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와 경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도와달라고, 베트남에 근무하는 동안 똑같은 표현을 수백 차례는 들어야 했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계기가 돼 하미미를 위령비의 추도문을 오랜만에 찾아 읽어봤다. 혹시나 하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마침 지난 11일에 하미 학살사건 50주기 위령제가 현지에서 열렸고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이 민간인 참배단을 구성해 참석했다고 한다.

양국은 '불행한 역사'를 넘어서 동반자 관계의 밑거름으로 삼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죽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진혼이 될 수 있고 산 자들에게도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 社 說

### '비긴급' 119 출동 안 한다

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사에서 즉시 출동한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나뉜 것이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을 마련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동물포획을 예를 들면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 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출동대별 기준이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2017년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천194건이다. 이중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42만3천557건(52.5%)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 출동 거부 기준이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得 能 莫 忘

得 能 莫 忘

▷ 뜻: 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것을 배운 후 (後)에는 잊지 않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 신속한 소방통로 확보해야 골든타임 지킬 수 있다

화재발생·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구급출동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별히 시민들의 협조와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는 흔히 재래시장이나 상가 주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고정화판이나 차광막 등 장애물을 도로 상에 비치해 예기치 못한 각종 사

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많은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

또한 시장이나 주택가·아파트 등의 이면도로나 소방통로에 불법 주차·정차할 때문에 긴급 화재출동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진입로의 주차구획선 밖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대형화재 발생 시 구조차, 고가사다리 등 특수소방차의 초기진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와 더불어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통로 상 불법 주차·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통로는 유사시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차·구조차 및 구급차 등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소방도로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화재시 현장까지 신속히 진입하여 원활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상시 주차·정차 질서 확립으로 상시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지난 서울 화재등 주택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각 가정·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임명철 / 무안소방서 민원반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 예 회 장 이 신 원 회 장 정 계 조  
 발 행 · 편 집 인 검 부 사 장 최 산 순  
 총 괄 이 사 이 홍 재 편 집 국 장 강 서 원  
 는 설 실 장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